

이달의

특 집

2020 개정세법 중 소득세, 법인세 관련 주요개정내용 해설

- 국세청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하고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
-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직무발명보상금)
-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 개선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받도록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로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방법 개선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을 강화하여 기장신고 유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4호) : 201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2.11. 공포

0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5)

가. 개정취지

- 어업인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input type="checkbox"/>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삭 제>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한도) 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input type="checkbox"/>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소득 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 (비과세 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소득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4조, 제64조의3, 제70조, 제73조)

가. 개정취지

-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세율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외의 위약금·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 ** (소득세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행 ○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이후분 퇴직소득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 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input type="checkbox"/>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퇴직전 ('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12.1.1.~'19.12.31까지 적용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다음의 금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단서 신설>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감소액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범위 축소 ○ (좌 동) - (좌 동) •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① 보조금관리법, ② 지방재정법, ③ 법인령 §64⑥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06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세법 제47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좌 동)												
<table><tr><th>총급여</th><th>공제율</th></tr><tr><td>500만원 이하</td><td>70%</td></tr><tr><td>500만~1,500만원 이하</td><td>40%</td></tr><tr><td>1,500만~4,500만원 이하</td><td>15%</td></tr><tr><td>4,500만~1억원 이하</td><td>5%</td></tr><tr><td>1억원 초과</td><td>2%</td></tr></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div><추 가></div>														
○ 공제 한도 : 2,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input type="checkbox"/>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8.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제공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18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9.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실제 수령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input type="checkbox"/>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소득세법 제81조의7,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8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가. 개정취지

-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① 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가산세 ③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④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복식부기의무자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input type="checkbox"/> 간편장부대상자 - 단, 다음은 제외함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81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8)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input type="checkbox"/>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input type="checkbox"/> 지연전송 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input type="checkbox"/>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합리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 의료업·약국업·수의사업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직 업종 <단서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 의무가입기한 - 의무가입대상 해당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단서 신설>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의무가입 범위 및 가입기한 합리화 ○ 도선사업 제외 명확화] (좌 동) · 도선사업 제외 - (좌 동) ○ 의무가입기한 축소 및 예외 신설 - 3개월 → 60일 · 단,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 의무가입대상 해당일 명확화 - 해당업종의 사업개시일 -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제164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 (3분기분)10.31. (4분기분) 1.31.
<input type="checkbox"/>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및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4호의4 서식)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소득 ○ 반기 근무분에 대한 비과세소득	<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 * 귀속연도 후 지급분은 미제출 <삭 제>

<input type="checkbox"/> 소득자 범위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세부 서식 ① 근로소득(별지 제24호의4(1)) ② 거주자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2))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3)) ④ 비거주자 사업·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별지 제24호의4(4))	<input type="checkbox"/> 소득자 범위 축소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제외 <input type="checkbox"/> 세부 서식 통·폐합 ① (좌 동)] ②에 통합 (③ 삭제) ④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가. 개정취지

-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등록시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상), 연임 대료 인상률(5%) 준수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 (3분기분) 10.31. (4분기분) 1.31.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input type="checkbox"/>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p>※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의 승인	<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을 개선하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계산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p> <p>○ (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p> <p>*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 최다지분자간 합의에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p> <p>○ (좌 동)</p> <p>-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p> <p>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p> <p>*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p> <p>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p> <p>*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p> <p>-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p> <p>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p> <p>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p> <p>*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여·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가. 개정취지

-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 자산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 중간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근속연수를 통산하고 중간지급 시점에서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 ○ 종업원의 임원 전환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장으로 진출 ○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좌 동)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에 지원한 면접응시자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가. 개정취지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 →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input type="checkbox"/>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 (좌 동) ○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개정취지

-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대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의 과세제외 ○ 필요경비 = Max[양도가액 × 필요경비율, 실제 필요경비] ○ 필요경비율 : 80% - 단,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	<input type="checkbox"/>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 (좌 동) ○ 필요경비율 <table border="1"> <tr> <th>양도가액</th><th>필요경비율</th></tr> <tr> <td>1억원 이하</td><td>90%</td></tr> <tr> <td>1억원 초과</td><td>0~1억원까지 : 90% 1억원 초과분 : 80%</td></tr> </table> - (좌 동)	양도가액	필요경비율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0~1억원까지 : 90% 1억원 초과분 : 80%
양도가액	필요경비율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0~1억원까지 : 90% 1억원 초과분 :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제9항)

가. 개정취지

-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div> </div>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적용* 요건 * (원칙)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우대)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input type="checkbox"/>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 §44④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08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부세무조정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input type="checkbox"/>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성실신고확인) 2020.2.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외부세무조정) 2020.2.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3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30.까지 신고	<input type="checkbox"/>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3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산정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단서 추가>	<input type="checkbox"/>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 ○ (좌 동) -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5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가. 개정취지

-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시 이자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되어 이월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환수시 이자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일부터 환급취소 결정일까지 기간 × 1일 0.025%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좌 동)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상당액 계산 기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징수세액의 고지일 × 1일 0.0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미만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업종구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신 설> ○ 7천5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 (좌 동)
---	--

34.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가. 개정취지

- 중복되는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관련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의무면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간주 →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① 변호사업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음식점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77개 업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 10px 0;"></div> (좌 동) ⑥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개 업종) ⑦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 ①~⑥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6.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업체

가. 개정취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9.11.26. 제정, '20.8.27.시행) 제정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적격 P2P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례 ○ (대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14% ○ (적용기한) '20.12.31. ※ 비적격 P2P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 적용 	<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8.27.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부터 적용

37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 연 2.1%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

3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9.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 소득금액 = Min[①, ②] 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②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소득상한배율 ○ 소득상한 배율 - 간편장부 대상자 : 2.6 - 복식부기의무자 : 3.2 ○ 적용기한 : 2021.12.31. 까지	<input type="checkbox"/> 소득상한배율 적용 합리화 ○ (좌 동) ○ 소득상한 배율 0.2P 인상 - 간편장부 대상자 : 2.6 → 2.8 - 복식부기의무자 : 3.2 → 3.4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 중소기업 주식 판단시점 변경
-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의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4호) : 201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2.11 공포

0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제6항, 제105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제1호, 제118조의2 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제118조의8)

가. 개정취지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계산 ◦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 ◦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주식 : 250만원 ◦ 해외주식 : 250만원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계산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250만원 적용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 등

(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간접 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주식 양도 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 기준</p> <p>*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인 법인</p> <p>○ (부동산 비율)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p>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p> <p>② 직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 당액</p> <p>○ (타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부동산등* 가액/자산총액</p> <p>*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p>	<p>□ 합산대상 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범위 확대</p> <p>(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p> <p>○ 직접 보유 → 직접·간접 보유</p> <p>○ 타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 포함 부동산등 보유비율 : (① + ②)/자산총액</p> <p>① 부동산등 가액</p> <p>②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시가액 ×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p> <p>* 부동산등 보유비율 = $\frac{A}{B}$</p> <p>A :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p> <p>B : 특수관계법인의 자산 총액</p> <p>※ 경영지배하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③에 따른 법인</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가. 개정취지

-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촉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촉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촉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으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만,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 94④4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04.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input type="checkbox"/>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추 가>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차익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 * 전체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좌 동) </div>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 8%, 최대 80%(10년보유) * 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times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	(좌 동)
---	-------

05.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 (지정지역 외) - 기본세율* + 10%p 중과 ○ (지정지역 내) - 기본세율* + 20%p 중과 * 기본세율 : 6%~42%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20%p 중과대상 배제 (좌 동)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0%p 중과배제 * 10%p 중과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①·④·⑦ 각호 : 2년이상 보유토지등, 단기양도,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 (좌 동) ◦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가. 개정취지

-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 관서장에 제출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 제88호 서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7.1.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8. 신축·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신축·증축(85㎡ 초과 증축에 한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0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배제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원칙)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 ○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① 무주택 1세대 1조합원입주권 ② 1조합원입주권+1주택으로서 3년 이내 조 합원입주권 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① (원칙) 보유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input type="checkbox"/> 등록임대주택도 8 지거주 요건 적용] (좌 동)

② (특례) 거주요건(2년) 미적용 -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인 경우	○ 특례 삭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경과조치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 168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 적용

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67조의5, 제168조의12)

가. 개정취지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154)

② 단기보유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2)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부수토지 배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 동)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p> <p>*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p> <p>○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p> <p>○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p> <p>*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p>	<p>□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p> <p>○ (좌 동)</p> <p>○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p> <p>*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p> <p>-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주택 양도(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i)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ii)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13.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특례 내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 (적용 상속주택수) 1개 상속 주택만 인정 -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좌 동) ○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div>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가. 개정취지

-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p> <p>○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p> <p>○ (3년 적용·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지급 소송진행 중 <p><추 가></p>	<p>□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p> <p>(좌 동)</p> <p>○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진행중</p> <p>※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p>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155) <p>*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자 → 거주주택 비과세(장기임대주택은 평생 1회)</p>	<p>□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및 명확화</p>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 등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2018.9.14. 이후 1주택 보유자가 매입하는 조 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은 제외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 서 증액 가능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 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 §44④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 부터 적용
-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6.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67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 기간 계산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평생1회) ○ (적용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 사업 추가

<p>소규모재건축사업</p> <p>〈추 가〉</p> <p>○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p>	<p>-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p> <p>○ (좌 동)</p> <p>※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167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p> <p>○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p> <p>○ 임대차계약서 사본</p> <p>○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p>	<p><input type="checkbox"/>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p> <p>〕 (좌 동)</p> <p>○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신설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순서로 소유자 의제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③ 최연장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시 중소기업 주식 판단시점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주식 판단기준 ○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1~3월 양도 : 전전년도 기준 적용 4~12월 양도 : 전년도 기준 적용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판단시점 변경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기준으로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등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의 범위 * 자산총액 등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적용대상)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 ○ (주식 보유비율) 100분의 50 이상	<input type="checkbox"/> 과점주주의 범위 수정 ○ (좌 동) ○ 100분의 50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 방식을 일치하도록 하여 과세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 - 취득가액 :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 *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이登記된 재산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61⑤에 따라 산정 - 취득가액 :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input type="checkbox"/>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 +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input type="checkbox"/>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좌 동)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추 가> ○ 과세표준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양도비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3em; margin-right: 10px;">}</div> <div>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 (좌 동) </div> </div>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 §60에 따른 가액 <추 가> ②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증법」 §61~§66에 따른 가액	<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증여 자산에 포함 ○ (좌 동) ○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법」 §60에 따른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4 제3항,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11 제1항)

가. 개정취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의 대상 *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기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 ~ 바)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 문화재주택, 상속주택 등 ○ (2주택자) 동거분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제외 대상에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 0 auto; width: 20px;"></div> (좌 동)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20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비교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원칙) 확정신고 생략 가능 ○ (예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 신고 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동산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 본공제에 따라 당초 신고세액과 달라지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좌 동) ○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 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식과 자산호별 산출 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7.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비용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 적용 ○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재산 (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감정가액 인정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개선
-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4호) : 201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2.11. 공포

0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 $\frac{\text{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times \text{국외원천소득} - \text{“직·간접비용”}}{\text{과세표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 직·간접비용	<input type="checkbox"/>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직접 비용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직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해당 국외 원천소득과 그 밖 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간접 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 으로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 한 국외원천소득 관련비용		간접 비용	(좌 동)	
	구분	안분계산 방법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신 설>

○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
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 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특례는 2021.1.1. 이후 적용)

02.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가. 개정취지

-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p> $= \frac{\text{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times \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ext{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p>	<p><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신설</p> <p>① 매출액 방법(Sales method)</p> <table border="1"> <tr> <th>R&D 활동*</th><th>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h></tr> <tr> <td>국내> 국외</td><td>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times \text{외국자회사 등**}}{\text{매출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td></tr> <tr> <td>국내< 국외</td><td>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td></tr> </table>	R&D 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times \text{외국자회사 등**}}{\text{매출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 국외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R&D 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times \text{외국자회사 등**}}{\text{매출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 국외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p>* R&D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을 국내·외로 구분</p> <p>** 거주자·내국법인이 50% 이상 직간접 출자 외 국법인</p> <p>② 매출총이익 방법(Gross income method)</p>	
R&D 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75%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매출총이익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p>○ 납세자는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가능(5년 적용) 단, 다음요건 해당시 별도 산출</p>	
요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① 방법 × 50% > ② 방법	① 방법 ×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3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상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음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외 유가증권 투자, 금전 대부, 기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 권리 등 임대, 사용하여, 양도, 교환으로 인한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발행, 취득, 양도,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규칙상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top: 20px;"> <p><삭 제></p> </div>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0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비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에 대해 비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비용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영업권, 시설 물이용권 ② 부동산 주식* <추 가>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	<input type="checkbox"/> 국내 부동산 주식의 과세대상 명확화 (좌 동) -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 한-미 양국은 '99년 상호합의를 통해 조약 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 지국으로 합의

06.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가. 개정취지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과세대상) 다음의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지급·양도 대가	<input type="checkbox"/>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제1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기타소득* * 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국내 부동산, 기타 자산,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 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배상금 ③ 기타(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국외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등 대가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④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상 계약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율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기타소득 : 20%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p>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모든 소득*</p> <p>*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탁익 등</p> <p>-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p>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율 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p>- (예외) 상기④ 기타소득 : 15%*</p> <p>* 조세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8.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 2010년 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7 사업소득)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 시 손금산입 요건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내부거래 시 손금불산입 비용 <input type="checkbox"/>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예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input type="checkbox"/> (좌 동) <p>- 다만,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향후 조세조약 개정분부터 적용)</p>

○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	<p>*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손금산입</p> <p>○ (좌 동)</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적용

09.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귀속소득(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p> <p>○ 2단계 접근법 사용</p> <p>- (1단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내·외부거래 인식</p> <p>거래 인식의 고려사항</p> <p>① 수행하는 기능</p> <p>② 부담하는 위험</p> <p>③ 사용하는 자산</p>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p>□ 귀속소득 계산 방법 구체화</p> <p>○ (좌 동)</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거래 인식의 고려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수행하는 기능 + 중요한 인적기능</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거래 인식의 고려사항</p> <p>①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p> <p>②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p> <p>③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p> <p>④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p> <p>⑤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p> <p>⑥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p>

- (2단계)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7 사업소득) 반영	- (좌 등) ※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7 사업소득) 추가 반영
--	---

10.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div>□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의 경정청구</div> <table><tr><th>구분(청구권자)</th><th>경정청구 대상</th></tr><tr><td>국세기본법(국외 원천징수대상자)</td><td>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td></tr><tr><td rowspan="4">소득세법(소득의 실질귀속자)</td><td>조세조약 적용 과오납</td></tr><tr><td>비과세·면제 미적용</td></tr><tr><td>제한세율 미적용</td></tr><tr><td><추 가></td></tr></table>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국세기본법(국외 원천징수대상자)	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	소득세법(소득의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비과세·면제 미적용	제한세율 미적용	<추 가>	<div>□ 경정청구 절차 일원화 및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범위 확대</div> <table><tr><th>구분(청구권자)</th><th>경정청구 대상</th></tr><tr><td>예외적인 경우*</td><td>경정청구 가능하되,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td></tr><tr><td colspan="2">*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td></tr><tr><td rowspan="4">(좌 등)*</td><td>(좌 등)</td></tr><tr><td>(좌 등)</td></tr><tr><td>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td></tr><tr><td>후발적 사유 발생</td></tr></table>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되,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좌 등)*	(좌 등)	(좌 등)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발생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국세기본법(국외 원천징수대상자)	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																				
소득세법(소득의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비과세·면제 미적용																				
	제한세율 미적용																				
	<추 가>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되,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좌 등)*	(좌 등)																				
	(좌 등)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발생																				
<div>* 후발적 사유(판결, 귀속자 변경, 상호합의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div>	<div>*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에는 청구권자의 자료 제출의무, 과세관청의 보완요구권 등이 규정 →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 부여</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접대비 한도액 상향
-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 상향
-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 가능한 자산에서 금형 제외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3호) : 2019.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96호) : 2020.2.11. 공포

01.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되는 자산수증이익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다음의 금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단서 신설>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범위 축소 ○ (좌 동) - (좌 동)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0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input type="checkbox"/>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50%		100% 미만	50%
	30% 초과			30% 이상	
	30% 이하	3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100% 미만	50%
	50% 초과			50% 이상	
	50% 이하	30%		50% 미만	30%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이하	90%		40% 이하	90%
	30% 초과			30% 이상	
	30% 이하	8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이하	90%		80% 미만	90%
	50% 초과			50% 이상	
	50% 이하	80%		50% 미만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0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세법 제2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접대비 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0.2퍼센트</td></tr> <tr> <td>100억원 초과</td><td>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td></tr> <tr> <td>500억원 이하</td><td>0.1퍼센트</td></tr> </tbody> </table>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이하	0.1퍼센트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0.3퍼센트</td></tr> <tr> <td>100억원 초과</td><td>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td></tr> <tr> <td>500억원 이하</td><td>0.2퍼센트</td></tr> </tbody> </table>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이하	0.2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이하	0.1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이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 (적용제외 대상)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7①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명*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 (좌 동) ○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

07.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 (좌 동) ○ 예외법인 추가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손금의 범위 ○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인건비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좌 동)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30만원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선비 세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적 지출* :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즉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수익적 지출 : 즉시 손금 산입 	<input type="checkbox"/>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300만원 → 6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자산 ○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 (좌 동) ○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좌 동) - 공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① 지정단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청·추천기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 할세무서) ◦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 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 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홈페이지 개설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정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input type="checkbox"/> 지정기간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② 사후관리단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절차 변경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 (좌 동)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 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1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③ 지정취소단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사항* * 의무이행사항 위반시 지정취소 가능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의무이행사항 추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div> (좌 동) ○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div> </div>
<input type="checkbox"/>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예고통지) 국세청 → 주무관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 주무관청 → 국세청	<input type="checkbox"/> 절차 변경 ○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세청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1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가. 개정취지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1,0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산입 ○ 1,0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조정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1,000만원 → 1,500만원</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임차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임차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① + ② $\times 50\%^*$, $8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

<p>***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등</p> <p>①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 : 100%</p> <p>-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p> <p>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50%</p>	<p>①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p> <p>- 일시적 자금예치 → 3개월 이하 자금 예치*</p> <p>*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p> <p>② 수익사업소득금액-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p> <p>- 법정기부금</p> <p>* 매출누락, 횡령, 사적비용 등으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산업재해보상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p> <p>○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p> <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등</p> <p><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범위 확대</p> <p>○ 대상 법률 추가</p> <p>- (좌 동)</p> <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제출 대상)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70% 이상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제출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 §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②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 개정취지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 법 §24(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뿐 아니라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 귀속시기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 기부금범위 명확화 ○ 법 §24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1.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가. 개정취지

-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input type="checkbox"/>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추 가>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div> (좌 동)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div>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2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가. 개정취지

-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 1017호 → 제1116호로 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 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대여액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개선
-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3호) : 2019.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96호) : 2020.2.11. 공포

0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div><div><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div><div>*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div>국외원천소득 - “직·간접비용” 과세표준</div></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좌 동)</div><div><input type="checkbox"/>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div><div><input type="checkbox"/>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div></div>							
<div><div><div><div>직접비용</div><div>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div></div><div><div>간접비용</div><div>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비용</div><div><table><tr><td>구분</td><td>안분계산 방법</td></tr><tr><td>동일 업종</td><td>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td></tr><tr><td>다른 업종</td><td>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td></tr></table></div></div></div></div>		구분	안분계산 방법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div><div><div><div>직접비용</div><div>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div></div><div><div>간접비용</div><div>(좌 동)</div></div></div></div>	
구분	안분계산 방법								
동일 업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div><신 설></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div></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특례는 2021.1.1. 이후 적용)

02.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가. 개정취지

-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div><신 설></div> <div>※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div>	<div><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신설</div> <div>① 매출액 방법(Sales method)</div> <table><tr><td>R&D활동*</td><td>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d></tr><tr><td>국내>국외</td><td><div>연구개발비용 × 50% × 외국자회사 등**</div><div>매출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div></td></tr><tr><td>국내<국외</td><td><div>(연구개발비용 ×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div></td></tr></table> <div><div>* R&D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을 국내·외로 구분</div><div>** 거주자·내국법인이 50% 이상 직간접 출자 외국법인</div></div> <div>② 매출총이익 방법(Gross income method)</div> <table><tr><td>R&D활동*</td><td>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d></tr><tr><td>국내>국외</td><td><div>연구개발비용 × 75%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div><div>〔매출총이익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div></td></tr><tr><td>국내<국외</td><td><div>(연구개발비용 ×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div></td></tr></table> <div>○ 납세자는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가능(5년 적용) 단, 다음요건 해당 시 별도 산출</div> <table><tr><td>요건</td><td>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d></tr><tr><td>① 방법 × 50% > ② 방법</td><td>① 방법 × 50%</td></tr></table>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50% × 외국자회사 등**</div> <div>매출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div>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div>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75%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div> <div>〔매출총이익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div>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div>	요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① 방법 × 50% > ② 방법	① 방법 × 50%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50% × 외국자회사 등**</div> <div>매출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div>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div>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75%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div> <div>〔매출총이익 +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div>															
	국내<국외	<div>(연구개발비용 ×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div>															
	요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① 방법 × 50% > ② 방법	① 방법 ×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 기타사의유출

04.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② 부동산 주식* <추 가>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	<input type="checkbox"/> 국내 부동산 주식의 과세대상 명확화 (좌 동) -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 한-미 양국은 '99년 상호합의를 통해 조약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

05.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법인세법 제93조)

가. 개정취지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과세대상) 다음의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지급·양도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기타소득* * 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input type="checkbox"/> 국외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등 대가 추가

<p>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① 국내 부동산, 기타 자산,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p> <p>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배상금</p> <p>③ 기타(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율</p> <p>○ 국내원천 기타소득 : 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④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상 계약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모든 소득*</p> <p>*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이익 등</p> <p>-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p>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율 특례 신설</p> <p>○ (좌 동)</p> <p>- (예외) 상기④ 기타소득 : 15%*</p> <p>* 조세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 ※ 2010년 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7 사업소득)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 시 손금산입 요건</p> <p>○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인정</p>	<p><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요건 완화</p> <p>○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에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p>

<input type="checkbox"/> 내부거래시 손금불산입 비용 <input type="checkbox"/>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예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만,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향후 조세조약 개정분부터 적용) *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8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input type="checkbox"/>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음의 소득 ① 국외 유가증권 투자, 금전 대부, 기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 권리 등 임대, 사용허여, 양도, 교환으로 인한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발행, 취득, 양도,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규칙상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20px;"> <삭 제>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9.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div>□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귀속소득(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div> <div>○ 2단계 접근법 사용</div> <div>- (1단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내·외부거래 인식</div>	<div>□ 귀속소득 계산 방법 구체화</div> <div>○ (좌 동)</div> <div>- (좌 동)</div>								
<table><tr><td>거래 인식의 고려사항</td></tr><tr><td>① 수행하는 기능</td></tr><tr><td>② 부담하는 위험</td></tr><tr><td>③ 사용하는 자산</td></tr></table>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① 수행하는 기능	② 부담하는 위험	③ 사용하는 자산	<table><tr><td>거래 인식의 고려사항</td></tr><tr><td>① 수행하는 기능 + 중요한 인적기능</td></tr><tr><td>(좌 동)</td></tr><tr><td>(좌 동)</td></tr></table>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① 수행하는 기능 + 중요한 인적기능	(좌 동)	(좌 동)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① 수행하는 기능									
② 부담하는 위험									
③ 사용하는 자산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① 수행하는 기능 + 중요한 인적기능									
(좌 동)									
(좌 동)									
<div><추 가></div> <div>- (2단계) 국조법 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div> <div>※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7 사업소득) 반영</div>	<table><tr><td>구체적인 적용 절차</td></tr><tr><td>①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td></tr><tr><td>②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td></tr><tr><td>③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td></tr><tr><td>④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td></tr><tr><td>⑤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td></tr><tr><td>⑥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td></tr></table> <div>- (좌 동)</div> <div>※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7 사업소득) 추가 반영</div>	구체적인 적용 절차	①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	②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③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	④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⑤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⑥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구체적인 적용 절차									
①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									
②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③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									
④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⑤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⑥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 국내 기업이 외국법인 등의 인적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에 대해 비용 인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 (좌 동)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비용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 신청 후 관할	<input type="checkbox"/>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국기령 §27의4)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국기령 §43의3②)*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과 동일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12.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5, 제98조의6)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청구권자)</th><th>경정청구 대상</th></tr> </thead> <tbody> <tr> <td>국세기본법 (국외 원천징수 대상자)</td><td>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td></tr> <tr> <td>법인세법 (소득의 실질귀속자)</td><td>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 비과세·면제 미적용 ○ 제한세율 미적용 <추 가></td></tr> </tbody> </table> <p>* 후발적 사유(판결, 귀속자 변경, 상호합의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p>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국세기본법 (국외 원천징수 대상자)	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	법인세법 (소득의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 비과세·면제 미적용 ○ 제한세율 미적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절차 일원화 및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범위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경정청구 대상</th></tr> </thead> <tbody> <tr> <td>예외적인 경우*</td><td>경정청구 가능하되,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td></tr> <tr> <td>*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td><td>(좌 동)</td></tr> <tr> <td>(좌 동)*</td><td>(좌 동)</td></tr> <tr> <td></td><td>○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td></tr> <tr> <td></td><td>○ 후발적 사유 발생</td></tr> </tbody> </table> <p>*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에는 청구권자의 자료 제출의무, 과세관청의 보완요구권 등이 규정 →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 부여</p>	구분	경정청구 대상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되,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좌 동)	(좌 동)*	(좌 동)		○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		○ 후발적 사유 발생
구분(청구권자)	경정청구 대상																		
국세기본법 (국외 원천징수 대상자)	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																		
법인세법 (소득의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 비과세·면제 미적용 ○ 제한세율 미적용 <추 가>																		
구분	경정청구 대상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되,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절차 준용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좌 동)																		
(좌 동)*	(좌 동)																		
	○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																		
	○ 후발적 사유 발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